

균형발전과 수도권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

이 원 빈

(전문연구원·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wonvin@kiet.re.kr

〈요 약〉

수도권은 수많은 대기업 및 연구시설의 집중, 인천국제공항의 배후입지, 우수한 인력 및 교육환경 등 혁신인프라와 환경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수도권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은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신행정수도의 건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수도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대상지역으로 인식되어 수도권을 적극적인 지역산업정책 대상으로 추진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 및 상생발전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각 지역 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이 지방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그 파급효과를 통해 비수도권과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1. 필요성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번영하는 상생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참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행정수도의 건설,

동북아경제중심국가 건설 추진과 관련하여 수도권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도권은 지방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의 대상지역으로 인식되어 수도권을 대상

으로 적극적인 지역산업정책을 수행하는 데 제약요소로 작용하여 왔다.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존 및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수도권에서 산업클러스터의 형성과 성장에 제약이 되는 요소를 확인하고 산업클러스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수도권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산업집적 현황 : 한국 지식기반산업의 거점

2001년 말 현재 수도권이 전국의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액 기준으로 36.6%를 차지하고 있는데 (<표 1> 참조) 특히 주력기간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26.7%인 반면, 지식기반제조업의 전국대비 비중은 52.8%로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이 약 두 배를 넘고 있다.

주력기간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으로는 자동차, 기계, 섬유, 의류를 들 수 있고, 지식기반제조업 부문에서는 전자·정보기기산업의 비중이 타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28.4%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의류산업의 지역내 생산비중이 37.6%로 가장 높고, 섬유의 비중도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 의류의 경우는

전국대비 비중이 70.6%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기반제조업 중에서는 전자정보기기의 지역내 생산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전국대비로는 정밀기기가 1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인천은 주력기간산업에서는 기계, 철강, 자동차의 생산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지식기반제조업에서는 환경, 신소재, 정밀기기가 전국대비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경기도는 명실상부한 우리나라 최대의 산업집적지로서 전국 생산액의 25.9%를 차지하고 있고, 주력기간산업의 전국대비 생산비중에 비해 지식기반제조업의 비중이 거의 세 배에 달할 정도로 지식기반제조업이 편중되어 있다. 특히 반도체(69.5%), 생물(64.8%), 전자정보기기(43.2%), 정밀화학(35.7%)의 전국대비 생산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의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말 현재 종사자수 기준으로 63.5%에 달해 지식기반제조업보다 수도권 집중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에의 집적 정도가 매우 높고, 업종별로 보면 정보서비스, 기업지원서비스, 문화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은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전국대비 비중이 45.2%로서 우리나라 최대의 집적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업종

<표 1>

수도권의 산업집적 현황(2001년, 생산액 기준)

단위 : %

		권역 합계		서 울		인 천		경 기	
		지역내 비중	전국대비 비중	지역내 비중	전국대비 비중	지역내 비중	전국대비 비중	지역내 비중	전국대비 비중
기존 주력 산업	섬 유	7.3	31.8	17.5	12.1	2.6	1.5	5.9	18.2
	의 류	6.9	81.9	37.6	70.6	2.2	3.6	0.9	7.8
	신 발	0.9	48.6	2.4	19.1	1.3	8.9	0.6	20.6
	석유화학	0.8	3.8	0.6	0.5	2.5	1.6	0.5	1.7
	철 강	2.9	14.1	0.2	0.2	15.2	10.1	1.1	3.8
	기 계	8.2	40.6	5.1	4.0	20.9	13.9	6.5	22.7
	가 전	4.2	34.1	3.3	4.2	8.0	8.7	3.7	21.1
	자동차	13.8	29.2	1.0	0.3	14.4	4.1	16.5	24.7
	조 선	0.0	0.3	0.0	0.0	0.3	0.3	0.0	0.0
	소 계	45.0	26.7	67.7	6.3	67.5	5.4	35.7	15.0
지식 기반 산업	전자정보기기	28.4	51.8	22.7	6.5	8.4	2.1	33.4	43.2
	반도체	9.9	73.9	2.4	2.9	1.5	1.5	13.2	69.5
	메카트로닉스	3.4	45.4	1.7	3.7	4.6	8.3	3.5	33.4
	정밀화학	4.9	45.7	1.0	1.4	6.9	8.5	5.5	35.7
	생물산업	3.5	69.4	1.0	3.1	0.6	1.5	4.6	64.8
	정밀기기	1.6	56.4	2.3	12.9	2.1	9.7	1.4	33.8
	신소재	1.7	29.3	0.4	1.0	5.0	11.5	1.4	16.8
	환 경	1.6	55.6	0.6	3.3	3.5	16.9	1.4	35.4
	항공우주	0.0	0.4	0.0	0.1	0.0	0.0	0.0	0.3
	소 계	55.0	52.8	32.3	4.9	32.5	4.2	64.3	43.7
합 계	100.0	36.6	100.0	5.8	100.0	4.9	100.0	25.9	

자료 : 통계청,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 2002.

별로는 정보서비스의 집적 정도가 매우 높아 전국대비 비중이 65.0%에 달하고, 문화산업도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인천은 전국대비 비중이 3.6%로 제조업부문의 전국대비 비중보다 낮은 편이며 지역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물류가 41.4%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고 있고, 전국대비 비중도 5.9%로 인천지역 내의 다른 산업에 비해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는 전국대비 비중이 14.8%로서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인데, 전국대비 비중을 기준으로 보면 관광, 물류, 기업지원서비스의 집적 정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2〉 수도권 산업집적 현황(2001년, 종사자수 기준)

단위 : %

		권역 합계		서 울		인 천		경 기	
		지역내 비중	전국대비 비중	지역내 비중	전국대비 비중	지역내 비중	전국대비 비중	지역내 비중	전국대비 비중
기 존 주 력 산 업	정보서비스	25.9	76.0	31.1	65.0	9.8	1.6	13.8	9.4
	기업지원서비스	29.2	67.5	29.4	48.4	24.3	3.2	29.6	15.9
	문 화	12.6	71.1	15.0	60.1	6.1	1.9	6.9	9.0
	관 광	11.5	50.5	7.4	23.3	18.4	4.6	22.1	22.6
	물 류	20.8	52.5	17.0	30.4	41.4	5.9	27.6	16.2
	합 계	100.0	63.5	100.0	45.2	100.0	3.6	100.0	14.8

자료 :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2002.

(2) 수도권 산업의 전망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 지식기반산업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는 수도권은 향후에도 우수한 인력공급 용이, 대학, 연구기관의 밀집 등 양호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자·정보기기, 메카트로닉스, 정밀화학, 생물 등 과학기반형 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풍부한 혁신인프라와 수요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문화산업 같은 정보집약형 산업의 핵심거점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규모중심형의 기존 주력산업의 집적화는 점차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은 연구개발 기능을 중심으로 수도권의 핵심거점으로서의 집적비중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은 수많은 대기업 및 연구시

설의 집중, 동북아의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의 배후입지, 우수한 인력 및 교육환경 등 혁신인프라와 환경이 이미 잘 구축되어 있어 수도권에 대해 지식기반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책임과 기능을 부여하고 적극적인 지원체계가 구축된다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이 지방과의 역할분담을 통해 특화된 산업클러스터를 형성 발전시켜 나간다면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그 파급효과를 통해 비수도권과의 상생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현행 수도권 산업정책의 문제점

현행 수도권 정책은 집중화와 과밀화를 막는다는 취지하에 각종 규제를 가하는 행위제한 위주로 집행되고 있

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 중 산업 관련 기능에 대한 규제를 살펴보면 크게 산업생산과 관련되는 규제, 연구개발과 관련되는 규제, 각종 지원기능과 관련되는 규제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수도권에서 산업생산 기능과 관련된 제반 규제의 기본적인 가정은 수도권에서 산업입지 및 공장총량에 대한 규제의 결과, 수도권에 입지하고자 했던 산업생산 관련 기능들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됨으로써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의 효과로 충청권 지역에서 공장이전의 효과가 나타나긴 하였

으나, 이전한 기업들은 수도권 소재 기업 및 기관과 산업연계를 지니고 있어서, 이전지역 내의 연구개발기능, 산업지원기능과 연계를 통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는 데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도권에 대한 물리적 규제만을 통해 산업생산기능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의 발전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생산 관련 기능 입지역제 효과라는 측면에서 볼 경우에 수도권에서의 생산 관련 규제의 효과는 수도권에서 해당기능이 어느 정도 입지가 억제되었는가에 따라 실효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수도권에서의 제조업 생산 관련 입지는 계획입지, 공업지역 입지, 개별입지 등으로 유형

<표 3> 수도권의 산업 관련 규제의 종류

기능 구분		규제 제도	규제의 내용
산업생산 기능	제조업 관련	공장입지 규제	권역별, 공장규모별, 지역특성별, 업종별 공장의 신설, 증설, 용도변경 규제
		공장건축총량제	개별입지에서의 공장건축시 시도별 총량에 대한 규제
		공업지역 지정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지역 지정 면적 규제
	서비스업 관련	공장용지 조성사업	권역별 규모별 심의 및 허용대상 규정
		과밀부담금	일정규모 이상의 업무용, 판매용, 복합용 건축물에 대해 과밀부담금 부과
연구개발 기능	대학교 입지규제	대학의 종류별, 권역별 신설, 이전에 대한 규제	
	대학교 정원총량제	연도별 입학정원에 대한 총량 규제	
각종 지원 기능	공공청사 입지규제	공공청사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에 대한 규제	

화할 수 있는데, 계획입지의 경우 공장총량제에서 제외되어 규제의 효과 없고, 공업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해 별도로 규제되며, 개별입지는 공장총량제를 통해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전체에서 산업입지의 양을 조정하여 계획하는 산업입지계획은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며, 개별입지를 위한 공장총량제는 매년 공장총량제가 일정비율로 상향됨에 따라 산업입지 지연효과 외에는 입지역제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각종 산업입지에 대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도시형 업종과 첨단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입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허용대상 행위에 따라 다양한 업종기준을 마련하고 있어 어떤 기준에 의해 특정업종의 입지가 허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업종기준을 통한 수도권내 입지허용은 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연구개발 기능 확충과 관련하여 관련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먼저 교육부와 관련하여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 관련 규제의 결과 대학 입학정원의 상승은 억제되었으나, 대학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등 새로운 유형의 대학 신증설을 통해 대학의 규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원 대학의 경우 신설된 대학은 대부분 신

학대학원 대학으로 첨단기술 관련 대학원 대학은 전무하다. 교육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학원교육은 이미 전면개방이 이루어졌고, 고등교육 부문에서도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이 가능하며, 사립학교법의 개정으로 외국대학의 국내 설립요건이 완화되어 제도적으로는 외국대학의 국내진입이 허용되었으나, 현재까지 외국대학의 설립 실적은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이는 외국대학의 설립이 학교법인의 형식으로만 가능하고 수업료 등 수익금의 목적외 사용(본국으로의 과실송금)이 불가능하며, 수도권 정책에 묶여 수도권 내에는 대학을 설립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입법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는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신축을 금지하고, 매입에 의한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공공법인 사무소의 기능을 종래 17개에서 6개(무역·금융·보험·증권·언론·국제협력)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과 공공법인의 지방이전시 수도권에 잔류할 기능을 암시한 조치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수도권 산업클러스터 형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하게 될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 첨단과학,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공공법인은 수도권 잔류가 불가능하여 산업클러스터 형성의 핵심기능인 지원 기능을 담당할 주체가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수도권 정책의 기본방향

(1) 수도권의 국제적 도시경쟁력 제고 추진

90년대 이후 수도권의 위상은 지방과의 대립관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역할에 대해 주목받고 있는데 수도권은 중추관리기능의 집적지이자 혁신의 창출지로서 새로운 산업의 묘상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그 역할과 비중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면에서 수도권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대도시에서만 집적할 수 있는 산업, 창업기업, 도시형 지식기반산업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수도권 규제와는 차별화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수도권은 국내의 지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대도시권, 특히 동북아권역의 대도시권과의 경쟁에서 생존해야 하는 공간으로 재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2) 지역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추진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완화 대상으로 지정된 첨단산업 업종은 개별사안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수용하는 데는 한

계가 있다.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이 클러스터 형성에 필수적인 기능이 입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의 완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3) 수도권에 대한 투자 활성화 유도

수도권에 대한 각종 입지 규제와 더불어 수도권 정책 관련 조세 및 부담금제도는 대도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으로부터 그 이외 지역으로 법인본사나 공장의 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등 유인정책과 수도권 등의 지역에 대해서 각종의 조세를 중과세하거나 부담금을 징수하는 억제정책이 동시에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제상의 부담 가중은 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치열한 국제경쟁 속에서 외국기업 유치와 같은 외국인투자 활성화에서도 매우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투자활성화와 적극적인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수도권 투자에 대한 중과세나 각종 부담금과 같은 조세정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4. 세부정책 방안에 대한 제언

(1) 산업클러스터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

수도권 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첨단

산업 및 도시형산업의 지정의 근거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규제가 차별화되는 첨단산업의 분류가 너무 자의적이며, 제조업을 중심으로 첨단업종이 지정되어 국제기능, 금융기능, 물류기능, 문화산업기능 등 도시형 첨단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업종단위로 입지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혁신클러스터의 발전이 유망한 지역을 중심으로 클러스터 형성과 관련한 기업이나 대학의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규제완화가 추진되는 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식기반산업지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예 : 상암 디지털산업클러스터(DMC), 경기 반도체클러스터 등).

(2)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의한 수도권 규제 완화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첨단산업업종의 추가 및 변경, 공장신증설 범위 변경, 외국인투자기업 한시적 입지 허용 등이 남발되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수도권에서의 입지 불가피성과 향후 발전가능성, 지방산업에 대한 과급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에 따라 규제 완화

를 추진하여야 한다.

(3) 공장총량제의 우선적 개선

현행 공장총량제는 계획입지와 공업지역이 총량산정의 대상에서 배제되고, 공장총량이 경제여건과 지역산업 현황에 따라 상승함으로써 공장입지규제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장총량제는 선착순에 의해 배정되기 때문에 공장건축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지연하는 효과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시적인 공장건축 수요에 대한 초과를 유발하여 투기목적의 가수요를 유발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한 공장총량제로 인해 공장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무허가, 무등록 공장을 양산하여 부정적인 과급효과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공장총량제에 의한 공장총량의 배정은 공장설립 승인단계에 실시하도록 하되, 선착순 기준이 아니라 업종별·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승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4) 수도권과 지방간 기업발전단계별 입지특성을 반영한 입지규제 합리화

수도권에서 산업생산기능을 활성화

〈표 4〉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계층모델

단 계	창업준비기	창업기	초기성장기	고도성장기	성숙기 이후
입지공간	대학창업지원실 대학동아리	창업보육센터 S/W 창업지원실	소규모 벤처빌딩 아파트형 공장	지식기반집적지 기존 : 지정 신규 : 조성	기존입지 고수 축소 이전

자료 : 김경환·주성재·김갑성,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행태와 정책방향”, 「지역연구」(제18권 1호), 2002.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발전단계별로 입지수요를 파악하고, 각 단계별 입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입지지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도권에서는 창업준비기에서 초기성장기의 기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산업공간 제공 및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고도성장기에 있는 기업은 수도권에서 지식기반집적지 형태(산업클러스터)를 통해 존속이 불가피한 업종 및 지구에 한정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반면, 성숙기에 도달한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방이전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이전을 유도하고, 이전부지는 이전단계의 기업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5) 투자활성화를 위한 수도권에 대한 중과세 제도의 재검토

중과세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외부효과를 내부화함으로써 기업의 입지선정에 영향을 주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으나,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입지선정의

왜곡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발생시킨다. 다시말해 기업의 수도권집중 억제효과보다는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중과세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히려 수도권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와 침체되어 있는 수도권의 투자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이나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도록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은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대한 중과세의 과감한 폐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6) 수도권의 연구개발전문 클러스터의 구축

수도권은 장기적으로 산업생산기능의 비중 및 역할은 점차 축소되면서 국내산업의 두뇌역할을 담당하는 R&D기능을 점차 확대해나가는 연구개발의 전초기지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수도권에서는

신규 산업생산기능의 확충에 주력하 기보다는 기존의 구축된 생산기능을 활용하면서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전문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연구개발전문 클러스터의 형성을 도모하여 수도권의 핵심역량인 연구개발기능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존의 선형적 가치사슬체계를 탈피하여 연구개발, 생산, 마케팅 등의 각 부문별 전문기업의 육성을 통한 네트워크형 산업생산체계가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서 수도권의 기능적 역할을 새롭게 부여하고, 상하이나 도쿄 등 인근 경쟁도시와의 차별화를 통해 수도권의 국제적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외에도 연구개발인력의 양성을 위한 우수한 외국 교육기관이 쉽게 국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외국계 대학(원) 설립을 위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현행 법률상 첨단산업 관련 외국계 대학(원)의 설립은 허용되고 있으나, 외국계 대학원대학이 실질적으로 설립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 조건과 본국으로의 과실 송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법상 관련 규제개혁이 불가능하다면, 수도권의 연구개발기능 확충을 위해 첨단산업 업종, 국제적 전문인력 확충과 관련된 업종에 한해 영리법인 조건과

과실 송금의 허용이라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수도권 산업클러스터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인 수준의 외국 연구기관 및 기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국공유지 관련 조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 조건 조항 등을 개정하여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수도권에서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경쟁력 있는 연구소를 유치하는 경우 이를 수용하는 건물에 대한 과밀부담금 면제, 지원기금 용자, 연구원 및 동반자 가족을 위한 주택 및 취업 편의 등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산업클러스터에 대해서는 대학, 연구소, 기업간 전문인력의 상호교환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산업클러스터 내에서 인적 교류를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벤처기업에 대해 인정되는 교류를 지식기반산업 및 산업클러스터 집적지 내에서도 확대하여 상호 인적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7) 수도권의 기업지원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추진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하여 수도권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구

체적으로 수도권은 동북아금융 중심, 연구개발 중심, 국제업무 중심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수도권 산업클러스터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고려하여 수도권 내의 잔류기능이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기관 이전과 수도권의 기업지원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공공기관의 이전은 장기적으로는 모든 기관의 지방이전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공공기관 중 업무의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수도권의 핵심기능을 유지 보완하는 데 필요한 연구개발, 기업지원서비스 관련 기관이나 민간 부문과의 경쟁이 치열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전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수도권 산업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정부지원체계 구축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중소기업청 등 중앙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지식기반산업 관련 지원정책은 부처간 업무의 연계 및 조정기능이 없어 혼선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각 부처별 지식기반산업 지원정책의 조정 및 연계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지방정부에 대해 각 부처별로 직접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서는 업무별로 부서(해당 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전체적으로 조율, 조정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따라서 각 부처별로 추진 중인 각종 지원정책을 종합하여 사업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